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운영방안 및 주의사항 안내

2022.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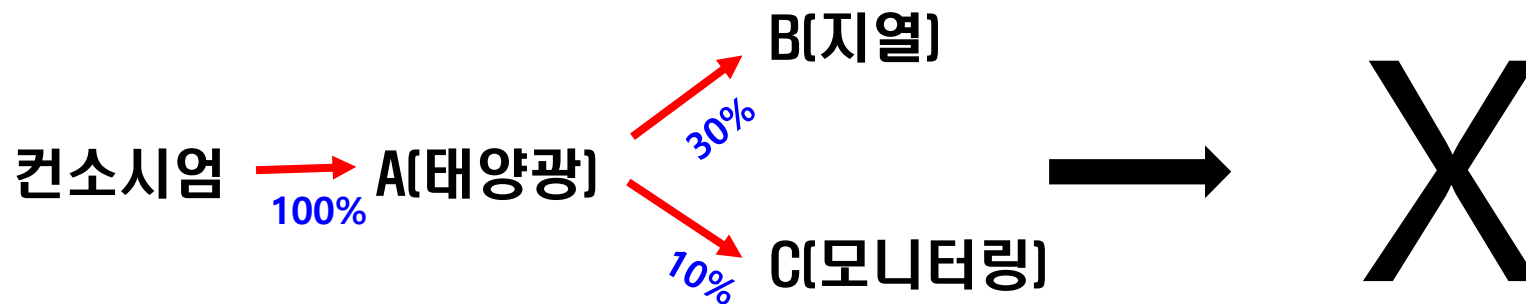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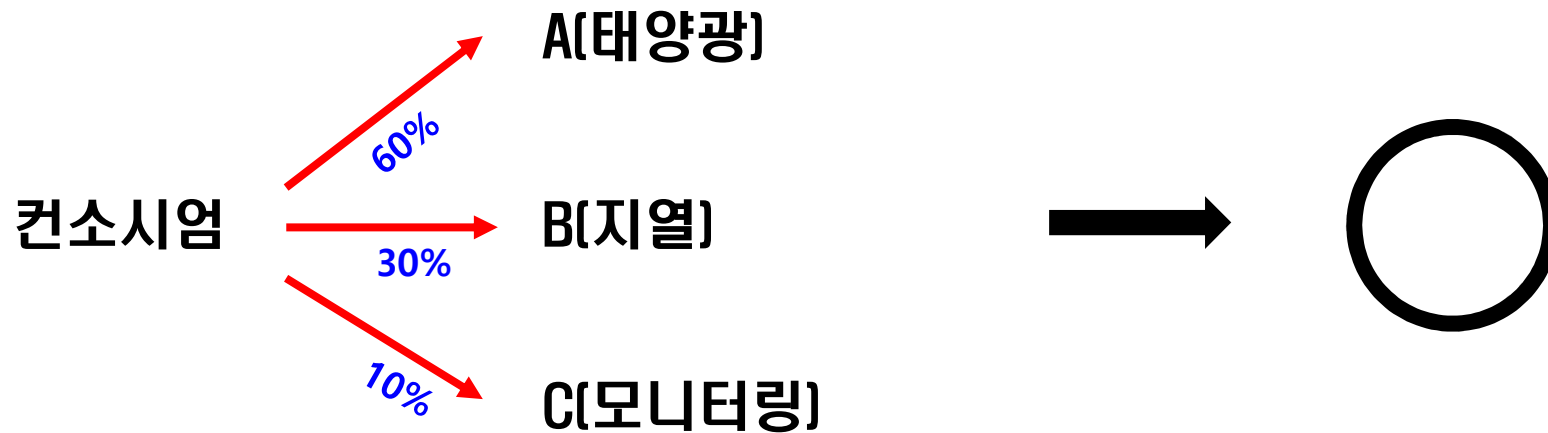


목 차

- 1 보조금 교부
- 2 하자보증서
- 3 시설비 편성
- 4 각 개소별 REMS 정상 연동 여부 확인
- 5 지자체 추가 비용 산정 관련
- 6 향후 융복합지원사업 변경 사항(예정)

1. 보조금 교부

- ✓ 보조금 지급동의서를 통해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 컨소시엄 내 각각의 업체에게 해당 보조금을 교부해야 함



1. 보조금 교부

- ✓ 보조금을 민간에 교부하는 경우
 - 실제 수요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함.
 - 이장 등 마을대표에게 전체 금액 교부 절대 금지(감사 지적사항)

1. 보조금 교부

✓ 세분화된 모니터링 비용을 각각의 업체에게 구분하여 교부

모니터링 (신규)	RTU 비용		263 개소	157,800	78,900	78,900	
	태양열 열량계 비용		(46) 개소	18,400	9,200	9,200	
	지열 열량계+전력량계 비용		(36) 개소	36,000	18,000	18,000	
	풍력 컨버터비용		0 개소	0	0	0	
모니터링 (고도화)	태양광	RTU 비용	252 개소	201,600	100,800	100,800	
	태양열	RTU 비용	40 개소	32,000	16,000	16,000	
	태양열	열량계 비용	(40) 개소	24,000	12,000	12,000	
	지열	RTU 비용	59 개소	47,200	23,600	23,600	
	지열	열량계+전력량계 비용	(59) 개소	82,600	41,300	41,300	
	연료전지	RTU 비용	개소	0	0	0	
	풍력	RTU 비용	개소	0	0	0	
	풍력	컨버터 비용	개소	0	0	0	
	소수력	RTU 비용	개소	0	0	0	
	ESS	RTU 비용	개소	0	0	0	
모니터링(유지관리)			614 개소	33,700	16,850	16,850	
소 계 2(최종사업대상 개소수)			614 개소	2,688,061	1,345,220	984,896	357,945
설계비 기준 (신재생사업비+모니터링비 3% 이내) :			80,640	80,640	40,252	40,388	0

- 20년 사업부터 **모니터링 비용 표기를 세분화** 하였음
- **모니터링업체에게는 RTU 비용만 교부**하고, **열량계 및 전력량계 비용은 해당 에너지원의 참여기업에게 교부**
- 열량계는 **시공단계**에서 설치해야 하는 문제, 업체간 금액 관계로 인한 **갈등** 등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 요망

1.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조기 집행

- 지자체마다 내규 및 조례 등이 상이하여 참여기관[시공기업]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기준 상이
- 대다수의 참여기관[시공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기성에 따른 지급이나 사업완료 후 지급시 사업지연 등 문제발생**
- 사업의 조기 **참여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권고**, 완료를 위해 **센터의 지급 방식(선급금, 잔여금)과 동일하게**
- **산업부에서 d-Brain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비 실행현황 조회 가능**

2. 하자보증서

✓ 하자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주의할 점

- 피보험자는 지자체/공공기관(개별 대상 아님)
- 개소별 발행 X, 에너지원별(모니터링 포함)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 발행
ex) 태양광 1장, 태양열 1장, 지열 1장, 모니터링 1장
- 하자보증서의 계약금액은 에너지원별 총합액과 같아야 함
- 컨소시엄에서 발행한 에너지원별 하자이행 계약금액이 에너지원별 금액보다 적을 시 부적합 처리
- 주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가 위 내용을 총괄하여 컨소시엄내 업체간 조율 필수

3. 시설비 편성

- ✓ 18년 국무조정실 감사결과에 따른 사항
 - 융복합사업비를 전액 시설비로 편성하거나 최소한 공공건물은 시설비로 편성해야함

- ✓ 시설비 편성에 따른 별도 계약절차 불필요
 - 시설비로 편성하더라도 사업 당해년도 입찰이 불필요함을 감사원에서 유권해석 하였음(책자 발간)

3. 시설비 편성

✓ 감사원 유권해석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지원사업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업체(이하 “참여기업”)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 에너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지원,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후 B광역시·A구·공단·참여기업·수요자(주민) 간 사업 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

• 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협약 이외에 별도로 계약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A구는 상급기관인 B광역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A구가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과는 별도로 업체 선정, 계약심사, 계약서 작성 등의 계약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및 제27조(보급사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계약심사대상 사업)

검토 결과 및 의견

-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개경쟁 평가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쟁에 의한 입찰(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의 행위로서 B광역시·A구·공단·참여기업·수요자(주민) 간 체결한 협약을 통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A구와 참여기업 간 별도의 계약 체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 다만, 용·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여기업과 별도의 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을 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에 따르면 행정절차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공모사업인 이 건 사업은 계약심사 제외 대상일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공사참여자가 이미 결정되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음

의견

신·재생에너지보급 용·복합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해 참여기업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는 바, A구가 참여기업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심사 제외 대상임
- 다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참여기업과 공사계약의 특수조건 등을 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기대 효과

•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

- ‘감사원(www.bai.go.kr) → [하단]적극행정면책등 감사소명제도 → 사례집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87P)’ 게시

4. 각 개소별 REMS 정상 연동 여부 확인

✓ 설치확인 서류검토 단계

- 서류검토 시 **REMS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 중
- 지열의 경우, 난방 및 온수 미사용으로 인한 **히트펌프 정지 시 미작동으로 표기**되는 문제 발생(태양열도 동일)
- 공단 지역본부와 협의 후 컨소시엄 내 전체 지열(태양열)을 **일정기간 가동**토록 하고 REMS에서 **데이터운전이력 확인 후 처리 예정**

✓ 설치확인 현장확인 단계

- 설치확인 현장확인 시 지열이 미가동 중이라면 **가동하여 REMS 정상 연동여부 확인**
[1분주기 데이터 송신으로 5분내 확인 가능]

5. 지자체 추가비용 산정 관련

✓ 융복합지원사업의 설치단가

-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과 달리, 융복합지원사업은 **모든 에너지원의 설치단가가 고정되어 있음**
- 지열의 경우 한전인입 전기공사, 보일러실 설치 비용 등 설치단가에 미포함된 사항은 **기타사업란에 추가 비용 수립 가능**
[단, 추가비용은 **지자체/공공기관 부담만 가능, 민간부담 불가**]

에너지원	형식 (용량)	/ 효율	개소	사업용량	총사업비	정부지원	지자체/공기관	민간
					(육지)	(육지)	부담	부담
		간선비 및 지열추가비용			210,000		210,000	
		주민수익창출형			41,840		41,840	
		기타사업3			0			
		기타사업4			0			

6. 향후 융복합지원사업 변경사항

✓ 기존 융복합지원사업 미정산 기관 참여제한 시행

- 사업 미완료 및 미정산에 따른 **공단 부담 증가**(국회, 기재부 등)
- 23년 사업공고를 통해 14~19년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주관기관 중 **미정산 기관은 사업참여 제한 시행 예정**
- **미정산 기준은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비 잔액 반납 여부임.**
[설치확인 완료 → 정산서류 제출 → 사업비 잔액 반납]
- 정산에 기간(최소2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정산 필요

※ **산업부 협의 중으로 변경 가능**